

차츰 탄핵심판 방해, 시정잡배 수준

김평우 변호사, 탄핵 '국회 탓' "국회 탄핵심판은 쉬어지게" 등 강성 발언... 이정미 권한대행 "말씀 지나치다"

"쉬어지게"를 13개를 만들었다. 13개 탄핵 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 쉬어지게 메뉴가 뭐냐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탄핵은 국회 탓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중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의 폭언을 해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은 개별 사유별로 이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하지만 "우리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만 제110조는 국회의장에게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의 안건의 제목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표결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 관련해) 기업 출연금 770억원을 뇌물죄로 한 부분이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탄핵사유"라며 "국회가 뇌물죄를 때서 독립적인 탄핵사유로 했다"며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의한 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과 모금 목적의 위법성에 찬성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가 대통령이 강요되거나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찬성한 것인지 어떻게 770억원을 받았다고 찬성했다고 보느냐"고 강조했다.

을 바라보며 주장한 김 변호사는 동료 대리인단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국정농단이란 뜻은 알고 썼느냐", "비선조직은 강대들이 쓰는 말이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자는 누군가, 여자 하나. 법관은 약자 편을 들어야 한다. 강자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급기야 "강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했다"면서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심 재판관을 직접 겨냥해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탄핵은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으로 여러 사유가 모여서 탄핵사유로 되는 게 아니다"며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씩 투표하고 3분의 2 넘는 것만 기재해 현재에 재판해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일괄 처리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법 권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하지만 현재가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에 대

"여러 소추사유를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회의 증거조사 없이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국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신문기사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에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건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탄핵소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험단 설립

과 관련해) 기업 출연금 770억원을 뇌물죄로 한 부분이 국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탄핵사유"라며 "국회가 뇌물죄를 때서 독립적인 탄핵사유로 했다"며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의한 부분은 뇌물죄가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과 모금 목적의 위법성에 찬성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가 대통령이 강요되거나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찬성한 것인지 어떻게 770억원을 받았다고 찬성했다고 보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70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되는 성격이 다르다"며 "민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박 대통령은 강요, 직권남용, 뇌물죄이기 때문에 중신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를 한다며 2004년 탄핵심판 선례에서 (탄핵소추 사유 일괄 처리 관련해) 국회의 자유권 행사라고 판결했으니 현재에선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

발언 내내 재판부에 등을 돌리고 방청객

이에 놀란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현재소장 등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추가했다.

앞서,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시작 전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 신뢰를 해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있는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시스

도의회 행사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돋보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중앙부처와 사무연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사무소 세종분소를 방문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울사무소 세종분소는 기획재정부 등 19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서울사무소로는 시·도간 정보수집 등 경쟁력 부분에서도 뒤처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7월 25일 세종시 내 세종중앙타운에 설치됐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 개소 후 추진할 성과와 SNS를 활용한 중앙부처 항우공무원과 협력 강화 등 올해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세종분소를 설치한 만큼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분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도영 의원, '청년층인구 유출' 대책마련 요구

전북도의 심각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해 슬관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서 제기됐다.

도의회 이도영 의원은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의 청년층 인구감소는 61만6,000명으로, 전북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부산과 대구, 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8만6,000여명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 "전북도가 민선 6기 들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 등을 위해 매진해왔지만, 그동안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TPT를 운영했지만 지난해만 7,000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결과를 낳아 전북도 청년정책의 근본적인 진단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싶을 지경"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도영 의원은 "인구의 시·도간 이동시 전입사유를 보면 직업으로 인한 이동사유가 33.3%로 가장 많다"며, 청년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인구 유출의 대책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주장했다.

한편 이도영 의원은 23일 개최하는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유승민 "전북 현안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탄핵정국에 대해 적극 사과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해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전북의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전북을 방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송하진 도지사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22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관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농생명 산업, 탄소산업,2030년 세계잡버리대회 유치 등 전북의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인사 등에 대해 더 강하게 밀렸어야 했다"면서 "최순실의 존재를 정말 몰랐으며, 미리 알았다면 기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당을 포함한 범보수 단일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를 국민과 언론에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는 그는 전북출신 인사 출대로 인해 "무장관무차관이란 소리를 듣으니 가슴이 참 따갑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되면 인사와 예산에 있어 섭섭해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재용 기자

또한 유 의원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모병제에 대해 "빈곤을 이유로 군대에 가는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구도는 그대로지만 자유한국당은 설 땅이

이어 "일반 사병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줘야 하는 모병제는 하사관이나 장교의 월급도 인상해야 하는 만큼 엄청난 예산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탄핵정국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유 의원은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서 일한 만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한계와 판단 부족을 보면서 바른말을 하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

김춘진 의원,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장에 임명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 의에서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권 연장 주장에 임명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무리 정당의 기본 목적이 정권 장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왜 전 새누리당에 인 위원이 임명됐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연 이 분이 정말 진지 목사였나. 한국 민주화에 나름대로 기여한 분이었던가 매우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인 위원은 촛불민심이 왜 이뤄졌는지, 새누리당이 왜 분당하고,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에게 사과 발언을 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국회의원조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상황을 잊었느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국민으로부터 용서받기 쉽지 않은 정당"이라며 "그런 정당이 가서 이제는 정권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니 스스로를 잊어 버렸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전직 목사이자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성직자로서 민주지성인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우곡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자리' 역할을 재장비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